

주간 통일정세

2017-10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3.4	김정은, 전쟁노병과 임상의학연구소 연구사에게 생일상 하사(연합뉴스)
		北 금속공업상 김충걸로 교체(연합뉴스)
		“김원홍 해임 여파 양강도 보위부 간부 7명 축출”(연합뉴스)
	3.5	“北, 논밭 갈아엎고 우상화 시설물 건립”(연합뉴스)
	3.8	北, ‘빨치산 1세대’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생일 100돌 기념(연합뉴스)
		北, 여성의 날 맞아 “사회의 당당한 주인” 체제선전(연합뉴스)
“北, 해외근로자에 인터넷 금지령…김정남 피살소식 차단목적”(연합뉴스)		
경제	3.6	북한, 아프리카에 요인 경호·무술 교관 파견 외화벌이(연합뉴스)
	3.8	“北 오토바이, 중국보다 비싸…인민보안성은 번호발급비 챙겨”(연합뉴스)
		“10년간 외형 키운 北 남포항, 교역량은 초라한 수준”(연합뉴스)
		“北은행들, 국제금융망서 퇴출”…자금줄 차단(연합뉴스)
		말레이, 北 ‘불법 외화벌이’ 겨냥…北 근로자 140명 체포(연합뉴스)
	3.9	“中, 北에 작년 대북수출금지품 425만 달러어치 수출”(연합뉴스)
사회 문화	3.5	올해 평양 상공 관광비행 프로그램 개시(연합뉴스)
		북한 4·15문학창작단에서 김정일의 혁명활동 다룬 장편소설 ‘아침노을’ 발간(연합뉴스)
	3.6	인민내무군 군악단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나선시 전쟁노병보양소 준공식 개최(연합뉴스)
		제32차 자강도 과학기술축전 개최(연합뉴스)
		북한 나무심기 대충대충…“산림 황폐화 개선 안 돼”(연합뉴스)
	3.7	北 “자체개발 지능형 손전화기 ‘진달래3’ 출시”(연합뉴스)
		北, 만리마선구자대회 앞두고 강원도서 군중대회(연합뉴스)
		나선시 가방공장 준공식 개최(연합뉴스)
		바둑경기 개최(연합뉴스)
	3.8	北 평양 여명 거리의 주택 건설작업 98% 완료(연합뉴스)
		北,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연합뉴스)
3.10	“김정남 피살 소식, 평양까지 전파…애들까지 ‘말레이’”(연합뉴스)	
	“회고 부러지고…북한군 참호파기 시험, 삼 불망으로 파행”(연합뉴스)	

외교 국방	3.4	방중 北 외무성 대표단 귀국(연합뉴스)
		北 “美 대북 군사적 압박 수수방관 않겠다”(연합뉴스)
		中 도착 리정철, 혐의 부인...말레이 수사는 北존엄 훼손 음모(연합뉴스)
		말레이, 北리정철 블랙리스트 올려...재입국 금지 조치(연합뉴스)
	3.5	말레이 부총리 “인내심에도 한계 있다”...北 억지주장에 ‘경고’(연합뉴스)
		말레이 경찰, “경찰이 가족살해 협박” 北리정철 주장 일축(연합뉴스)
	3.6	“북한, 제재 회피에 아프리카 주로 이용”...유엔 보고서 분석(연합뉴스)
		말레이 부총리 “강철대사 추방, 北에 ‘김정남사건 호도말라’는 뜻”(연합뉴스)
		강철 北대사 말레이서 추방돼...베이징 거쳐 평양행(연합뉴스)
		中, 북한 미사일 발사에 “유엔 결의 위반 활동 반대”(연합뉴스)
		日 아베 “北 미사일발사 새로운 위협...NSC 소집 대응”(연합뉴스)
		日 방위성 “北미사일, 오가반도 서쪽 300~350km 동해상 낙하”(연합뉴스)
		“고립 심화시키는 폭거”...日, 북 미사일 규탄 속 신속 대응(연합뉴스)
	3.7	北리정철, 외신활용 ‘아전인수’ 여론전...“말레이,자백강요해”(연합뉴스)
		이탈리아 외교부 “北미사일 발사, 세계 평화·안보 위협”(연합뉴스)
		北, 말레이 대사 ‘맞추방’ 결정...양국 극한 외교대립(연합뉴스)
		北 “주일미군기지 타격 탄도로켓발사 훈련했다”(연합뉴스)
		강철 北대사 베이징 도착...기자회견 없이 대사관 이동(연합뉴스)
		北 김락겸, 탄도로켓 발사훈련 참관...6개월 만에 등장(연합뉴스)
		“北 유엔대표부 참사관, 미사일 발사는 자위를 위한 조치”(연합뉴스)
		美, 北 도발 속 여행경보 한 달 만에 갱신...“체포·구금 위험”(연합뉴스)
		北매체 “美본토·침략기지 타격권 넣은지 오래” 위협(연합뉴스)
		中환구시보 “北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 대응용”(연합뉴스)
		日 국회, 北 미사일 규탄 결의...“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연합뉴스)
		EU·英·伊 “北 미사일 발사 즉각 중단하고 대화 복귀해야”(연합뉴스)
		크렘린 “北미사일 발사 심각히 우려...긴장고조 행동” 비난(연합뉴스)
		말레이 정부, 北 미사일 발사 규탄...“유엔 결의 준수하라”(연합뉴스)
		유엔, 北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 개탄”(연합뉴스)
		나토 “北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北, 대화 복귀해야”(연합뉴스)
	말레이 보건장관 “北, 부검도 않고 심장마비 주장...이해 안돼”(연합뉴스)	
	北, 자국내 말레이시아 국민 출국 임시금지(연합뉴스)	
	北억류맞선 말레이, 北대사관 전직원 출국금지...대사관주변 폐쇄(연합뉴스)	
	말레이 10일 내각회의서 북한과 단교 정식검토”(연합뉴스)	

	北 “주일미군기지 타격 탄도로켓 훈련…무자비한 핵강타”(연합뉴스)
	北, 이동식발사대로 논바닥에서 미사일 발사 사진 공개(연합뉴스)
	美언론 “北 발사 미사일 4발 아닌 5발…1발 실패”(연합뉴스)
	北 ‘핵전투부 취급훈련’ 첫 언급…“핵탄두 조립·탑재능력 과시”(연합뉴스)
	北,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발사 훈련 영상 공개(연합뉴스)
3.8	대북매체 “김정은, 전군에 ‘전투동원태세’ 명령”(연합뉴스)
	北 “안보리 언론성명 전면 배격…날강도 행위” 주장(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연합뉴스)
	말레이 총리 “북한과 단교 계획은 없어”…협상모드 전환(연합뉴스)
	아세안 10개국, 北미사일 발사에 우려 표명…“유엔결의 지켜라”(연합뉴스)
	美언론 “北, ‘북극성 2형’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 중”(연합뉴스)
	미국무부 “북한과 대화 열려 있지만, 의미있는 조치 선행돼야”(연합뉴스)
	유엔 주재 佛대사 “EU 대북제재 추가 검토”(연합뉴스)
	北, 미사일 도발 한미일 규탄에 “잠꼬대 같은 소리” 비난(연합뉴스)
	北 통신, 美의 ‘독재국가’ 규정에 “언어도단” 비난(연합뉴스)
3.9	러 법원, 자국 국경수비대원 폭행 北선원에 4년 징역형(연합뉴스)
	유엔서 비동맹운동 북한 지지성명 ‘불발’…“10여개국 반대”(연합뉴스)
	유엔 “북한 억류 말레이 직원 2명 베이징 도착”(연합뉴스)
	말레이 총리 “北정부, 억류된 우리국민 안전보장”…협상 탄력(연합뉴스)
	유엔 보고서 “북한, 핵 원료 ‘리튬6’ 해외에 팔려고 했다”(연합뉴스)
3.10	“이탈리아, 北외교관 승인 보류…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연합뉴스)
	美 38노스 “北 핵실험장 활동 계속…6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연합뉴스)
	말레이 “DNA검사 없이는 김정남 시신 인도 못해” 입장 재확인(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3.7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 현지지도	리병철, 김정식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3. 4.

■ 김정은, 전쟁노병과 임상의학연구소 연구사에게 생일상 하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아흔 번째 생일을 맞는 전쟁 노병 박종식과 여든 번째 생일을 맞이한 황해남도인민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사 김주진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2017. 3. 7.

■ 北 “주일미군기지 타격 탄도로켓발사 훈련했다”(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며 훈련에 '유사시 일본 주둔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힘.

2017. 3. 8.

■ 대북매체 “김정은, 전군에 ‘전투동원태세 명령’”(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전군(全軍)에 '전투동원태세' 돌입을 명령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북한 소식통을 인용, 8일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 1일 하달된 전투동원태세를 갖출 데 대한 최고사령관(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부대 밖에서 훈련하던 인원과 출장이나 부모사망에 따른 휴가, 표창휴가를 나간 군인 모두가 부대로 복귀했다"고 전했으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는 '1제대 군단' 갱도에 은폐된 포와 전차를 비롯한 각종 전투 장비를 진지로 이동시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함.
- 이어 "전연(전방) 군단 민경 부대(최전방 경비·수색 담당)들은 전투 복장 그대로 숙식해야 하고 부대장 이하 책임간부들의 자택 출퇴근도 금지됐다"면서 부대의

당직근무도 평시보다 한 등급 높은 지휘관들로 교체됐다고 주장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3. 4.

■ 北 금속공업상 김충걸로 교체(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4일 예성강청년3호발전소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전력공업상, 김충걸 금속공업상, 동정호 건설건재공업상 등이 참가했다"고 보도함.
- 신임 김충걸 금속공업상은 황해북도에 있는 황해제철연합소 지배인 출신으로 지난해 6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대해 연설한 바 있음.

■ 방중 北 외무성 대표단 귀국(연합뉴스)

- 리길성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4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김원홍 해임 여파 양강도 보위부 간부 7명 축출”(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의 검열로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해임되면서 그 여파로 지방 보위부 간부들도 줄줄이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가보위성 산하 각 도(道) 보위부를 대상으로 중앙당에서 파견된 검열단 검열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양강도에 서만 7명의 간부가 해임됐고, 다른 간부들도 철직(직위해제)위기에 몰렸다"고 전함.

2017. 3. 6.

■ 강철 北대사 말레이서 추방돼…베이징 거쳐 평양행(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 수사와 관련, 말레이시아 주권 침해 언행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강철 북한 대사가 6일 귀국길에 오름.
-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공항에 도착한 강 대사는 이날 오후 6시 25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이징행 말

레이시아항공 MH360편으로 출국함.

2017. 3. 7.

■ **강철 北대사 베이징 도착·기자회견 없이 대사관 이동(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 수사와 관련, 말레이시아 주권 침해 언행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강철 북한 대사가 6일 오후 6시25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이징행 말레이시아항공 MH350편으로 출국해 6시간여 만인 7일 0시 20분께 베이징 서우두 공항 3터미널에 도착함.
- 강 대사는 0시 40분께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서우두 공항 VIP 통로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감.

■ **北 김락겸, 탄도로켓 발사훈련 참관·6개월 만에 등장(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은 주일 미군기지 타격 임무를 맡은 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락겸과 정치위원인 전략군 중장 박영래가 현지에서 맞이했다고 7일 보도함.

다. 공식행사

2017. 3. 6.

■ **인민내무군 군악단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 북한 인민내무군 군악단 창립(3월 6일) 70주년을 맞아 기념보고회가 6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나선시 전쟁노병보양소 준공식 개최(연합뉴스)**

- 나선시 전쟁노병보양소 준공식이 지난 5일 림경남 나선시당위원장과 조정호 나선시인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함.

■ **제32차 자강도 과학기술축전 개최(연합뉴스)**

- 제32차 자강도 과학기술축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함.

2017. 3. 7.

■ 北, 만리마선구자대회 앞두고 강원도서 군중대회(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강원도 군중대회가 6일 원산시 해안 광장에서 진행되었다"고 7일 보도함.
- 행사 참가자들은 북한 당국이 올해 말 소집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앞두고 '자력자강'의 기세를 높여 총매진·총돌격하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했다고 신문은 보도함.
- 박봉주 내각 총리와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행사에 참석함.

■ 나선시 가방공장 준공식 개최(연합뉴스)

- 나선시에 신설된 가방공장 준공식이 지난 6일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함.

■ 바둑경기 개최(연합뉴스)

- 바둑애호가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의 바둑경기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가 7일 보도함.

2017. 3. 8.

■ 北, '빨치산 1세대'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생일 100돌 기념(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혁명열사 오진우 동지 생일 100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7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다고 8일 보도함.
- 리명수 군 총참모장은 "오진우 동지의 혁명 생애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총대로 옹호 보위하고 (중략)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어떻게 모시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실천 행동으로 보여준 참다운 혁명가의 빛나는 한생"이라고 말하며, 오진우가 '백옥같은 충정심과 혁명가적 품모'를 지니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순결한 마음'으로 받들었다며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빛날 것"이라고 언급함.
- 당일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전광호 내각 부총리, 김정임 노동당 중앙위 당 역사연구소 소장 등과 오진우의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함.

■ 北,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연합뉴스)

- 북한은 8일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국제부녀절) 107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함.
-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여성의 날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오늘 조선여성운동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가고 있다"며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존엄 높은 삶을 누려가는 조선여성들보다 긍지 높고 행복한 여성들은 이 세상에 없다"며 김정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날 중앙보고회에는 최룡해를 비롯해 전광호 내각 부총리와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장춘실 여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3. 7.

■ “北 유엔대표부 참사관, 미사일 발사는 자위를 위한 조치”(연합뉴스)

- 북한의 6일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리성철 참사관이 북한의 자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교도통신이 7일 보도함.
- 리 참사관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교도통신과 만나 "(미사일 발사는) 자위를 위해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공정 안에 있다"며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함.
-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이 수십년에 걸쳐 북한에 대해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해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2017. 3. 8.

■ 北, 여성의 날 맞아 “사회의 당당한 주인” 체제선전(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이날 '여성들의 모습에 비긴 사회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질곡 속에 신음하면서도 항변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조선 여성들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품속에서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함.
-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한 재일동포 여성의 글을 실고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남자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자본주의 일본이나 남조선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라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실은 여성의 날 사설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여성들의 처지는 날을 따라 악화되고 있다"며 가정의 울타리에 머물렀던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키운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이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자식들을 강성 조선의 기둥감들로, 혁명의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우며 어머니로서, 안해(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안보리 언론성명 전면 배경…날강도 행위” 주장(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주권 국가의 자위적 권리를 난폭하게 유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보문(언론성명)을 전면 배경한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미국의 '핵전쟁 책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 훈련이었다면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중략)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핵 선제타격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공공연히 벌려 놓으면서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발동"했다고 비난하며 "미국이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로 벌려놓은 핵전쟁 연습이야말로 우리를 초강경 행동으로 떠미는 근원이라는 것이 공정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라며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안보리에 제소했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핵탄두를 만장약한 무적의 화성포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하겠다고 주장함.

2017. 3. 9.

■ **北, 미사일 도발 한미일 규탄에 “잠꼬대 같은 소리” 비난(연합뉴스)**

- 북한군 전략군 대변인은 9일 "적대세력들의 '사드'니 '킬 체인'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의 무진 막강한 전략 무력 앞에 파철더미보다 못한 무용지물로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 식의 타격 능력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사주를 받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위협'과 '결의위반'으로 규정하는 공문을 발표했다면서 "유엔 력사(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오점을 기록하였다"고 비평하며,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내는 불법 무법의 '결의'를 언제 한 번 인정한 적이 없으며 적대세력들이 떠벌이는 '도발'이요 '위반'이요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한갓(한갓) 소음 공해로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발표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7. 3. 8.

■ **“北 오토바이, 중국보다 비싸…인민보안성은 번호발급비 책겨”(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김동남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중국산과 북한산 오토바이가 있다" "100cc면 한대당 1천 200~1천300달러(약 138만~150만원) 정도"라고 보도함.
- RFA에서는 중국의 최대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남방그룹이 제작한 125cc 오토바이는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서 3천~5천위안(약 50만~83만원)에 팔린다고 보도함.
-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RFA를 통해 "북한 오토바이가 중국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등록비도 많이 든다"며, 이는 "오토바이 번호를 발급하는 인민보안성

이 '얇은 장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2017. 3. 8.

■ “10년간 외형 키운 北 남포항, 교역량은 초라한 수준”(연합뉴스)

-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남포항이 2000년대 중반 처음 만들어진 이래 지난 10년간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함.
- 멜빈 연구원은 "남포의 컨테이너항은 북한에서 가장 크고,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며 "이곳 컨테이너항은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10년 동안 계속 확장해왔다"고 설명하며 "차량과 인적 이동, 컨테이너 수의 변화를 보면 북·중 관계의 변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남포항을 중심으로 교역활동이 꾸준히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임.
- 그러나 미국의 상업위성이 2016년 10월 4일에 촬영한 남포항은 공간이 충분함에도, 정작 항구에 보관 중인 컨테이너는 셀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 항구를 비교하면 북한 무역량이 얼마나 적은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밝힘.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3. 6.

■ 북한, 아프리카에 요인 경호·무술 교관 파견 외화벌이(연합뉴스)

- 6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미공개 보고서를 입수하여 북한은 1990년께부터 서아프리카 앙골라에서 대통령 경호 기술지도를 시작했다고 하며 작년 가을에 이뤄진 현지조사에서 북한 교관 요원 12명이 현지 당국자들을 상대로 무술과 퍼레이드 때의 경호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북한은 아프리카 중부 우간다에서도 군과 경찰의 훈련을 지도했으며, 북한 교관 45명이 경찰의 훈련을 지도하기로 한 계약은 작년 6월 만료됐으나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계약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함.

2017. 3. 8.

■ “北은행들, 국제금융망서 퇴출”…자금줄 차단(연합뉴스)

- 7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지난 6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몇 개 은행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최근 중단했다"고 보도함.

■ **말레이, 北 '불법 외화벌이' 겨냥...北 근로자 140명 체포(연합뉴스)**

- 8일 현지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州) 이민국과 해양경찰은 이날까지 총 140명의 북한 근로자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음.
- 이들 북한 근로자는 사라왁 주 쿠알라타타우 지역의 한 다리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유효한 취업허가증(워킹퍼밋)이 없이 방문 비자를 이용해 체류하며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아방 조하리 사라왁주(州) 주지사는 "그들은 유효한 워크퍼밋(취업허가서)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의 취업허가서는 이미 만료됐다. 이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다"며 "외무부에 문의해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36명의 북한인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종전과 다름 없이 출근했다"고 전함.

2017. 3. 9.

■ **“中, 北에 작년 대북수출금지품 425만 달러어치 수출”(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해 425만 달러(약 49억 원) 규모의 대북수출금지 품목인 라우터 등 전산장비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9일 보도함.
-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토대로 한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국은 북한에 라우터를 285만 달러, 마이크로프로세서 16만 달러, 서버는 약 124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으며, 중국의 대북 휴대전화 수출 규모도 총 6천만 달러에 달했음.

2017. 3. 10.

■ **“유엔 北대표부, 美컴퓨터회사 환불금 5년째 안 찾아가”(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Dell)로부터 환불금을 5년째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미국 뉴욕주(州) 감사원에 따르면 주(駐)유엔 북한대표부는 지난 2012년 델로부터 '제공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서비스'(undelivered goods/services)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이 생겼지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
- 델 측은 북한대표부가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자 뉴욕주 감사원에 보고했고, 이 돈은 5년째 '미청구 자산'(unclaimed fund) 목록에 올라 있다고 RFA는 전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3. 5.

■ “北, 논밭 갈아엎고 우상화 시설물 건립”(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논밭을 갈아엎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기 위한 시설물들을 건립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미국의 상업위성이 지난해 10월 23일에 촬영한 평안남도 성천군 군자리 혁명사적지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우선 정책으로 김 부자의 동상과 기념탑 건설은 전국에 걸쳐 빠르게 진행됐다"며 "공포통치와 함께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7. 3. 8.

■ “北, 해외근로자에 인터넷 금지령…김정남 피살소식 차단목적”(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최근 김정남 암살사건 소식 등이 자국민 사이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소식통은 RFA에 "조선(북한)이 해외공관에 조선 근로자들

의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같은 지시를 어길 경우 강제소환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고 밝힘.

- 소식통은 "당국의 지시내용은 첫째 인터넷에 접속하지 말 것과 둘째 어떤 뉴스를 접하더라도 옮기지 말 것, 셋째 접하게 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경우 강제소환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며 "평양의 지시는 해외파견 근로자들은 물론 공관원들의 인터넷 접속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내용"이라며 "지시가 내려진 이후 파견 건설자들의 스마트폰 불시검문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함.

라. 사회 동향

2017. 3. 5.

■ 올해 평양 상공 관광비행 프로그램 개시(연합뉴스)

- 평양 상공을 경비행기로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양 미림항공구락부(클럽)가 올해 관광비행을 개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함.

■ 북한 4·15문학창작단에서 김정일의 혁명활동 다룬 장편소설 '아침노을' 발간(연합뉴스)

- 북한 4·15문학창작단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일성종합대학 재학 당시 '혁명활동'을 다룬 장편소설 '아침노을'을 최근 내놨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2017. 3. 6.

■ 북한 나무심기 대충대충...“산림 황폐화 개선 안 돼”(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일 '식수절'(우리의 식목일)을 맞아 대대적으로 시행한 나무 심기가 형식에 그치면서 산림 황폐화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김정은이 집권 후 해마다 나무 심기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산들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며 "나무 심기도 중요하지만 심어 놓은 나무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산림조성 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며 "수림화, 원림화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함경북도 청진시는 지난해에도 수해복구를 위해 산에 있는 나무를 마구 베어내 송이버섯 생산지로 보호를 받던 청암구역 소관장과

대판장 산림마저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 되고 말았다"고 밝힘.

■ 北 “자체개발 지능형 손전화기 ‘진달래3’ 출시”(연합뉴스)

- 북한이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신형 스마트폰인 '진달래3'을 출시했다고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메아리'가 6일 보도함.
- 메아리는 이날 "우리 식의 새로운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 진달래3이 출품되었다"면서 "진달래3은 만경대정보기술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 완성한 지능형손전화기"라고 소개하며, "손전화기의 핵심을 이루는 주기판의 회로설계와 외형설계, 체계 프로그램(프로그램) 작성 등 모든 요소를 자체의 기술로 실현하고 제품화하였다"며 "진달래 손전화기는 날로 높아지는 사용자들의 기호에 맞게 앞으로 보다 훌륭히 갱신되어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함.

2017. 3. 7.

■ 北 평양 여명 거리의 주택 건설작업 98% 완료(연합뉴스)

- 평양 여명 거리의 주택 건설작업이 98% 완료됐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함.

2017. 3. 10.

■ “김정남 피살 소식, 평양까지 전파…애들까지 ‘말레이’”(연합뉴스)

- 북한 당국의 차단 노력에도 김정남 피살사건 소식이 북·중 국경을 넘어 평양까지 퍼지고 있다고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가 10일 보도함.
- 평양의 한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조(북한)·중 국경 지역에서 화교나 무역업자들이 (김정남 피살) 소문을 퍼뜨렸다면, 평양에서는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 대표부(직원)들이 소문을 몰고 왔다"고 밝혔으며, "(김정남피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와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면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 간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고 떠들다가 소문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전함.
- 평안북도의 소식통은 "원수님(김정은)의 형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죽었고,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던 간부(강철 대사)가 추방됐다는 소문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 됐다"며 "다만 주민들이 강철이란 이름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며, 장마당에서 말레이시아가 흔한 말이 됐다면서 "장사꾼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말레이,

말레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전함.

■ **“취고 부러지고…북한군 참호파기 시험, 삼 불량으로 파행”(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군이 전투용 공병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3월 5일 어랑비행장 근처에서 함경북도 경성군 주둔 인민군 제9군단 산하 부대들의 개인 참호파기 경기대회가 열렸지만, 공병삽 불량으로 경기는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전하며, "땅은 그리 얼지 않았지만, 자갈이 많은 장소를 선택해 깊이 1.2m, 직경 1m의 참호를 파도록 경기규칙을 정했다"며 "경기가 시작되자 출전 병사들의 삽자루가 부러지고 삽날이 휘어져 참호를 얼마 파지도 못하고 경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함.
-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RFA에 "공병삽은 군인들의 개인 장구류지만, 수량이 모자라 한 개 분대에 3개씩, 삽 하나에 두 명이 함께 쓴다"며 "그나마 2000년 이후에 생산된 공병삽은 재질이 물러 쓸 만한 정도가 못 된다"고 주장하면서 "인민군은 일반 보병이나 산악경보병 부대에만 개인 공병삽을 지급하고 포병이나 다른 기계화 부대들엔 그마저도 지급하지 못한다"며 "포병이나 기계화 부대들은 자체로 사들인 일반 삽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임.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3. 4.

■ **北 “美 대북 군사적 압박 수수방관 않겠다”(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에 새로 등장한 행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박과 침략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데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강행하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핵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 책동"이라며 "미국은 마치도(마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이 우리의 핵 보유 때문인 듯이 여론을 오도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이며

- "미국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핵 위협 책동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훨씬 이전부터 끊임없이 감행되어왔다"고 주장함.
- 또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과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핵 위협 공갈, 핵 무력증강 책동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인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고도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근본요인"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가해오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전략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2017. 3. 7.

■ 美, 北 도발 속 여행경보 한 달 만에 갱신...“체포·구금 위험”(연합뉴스)

- 미 국무부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여행경보에서 "심각한 체포 및 장기 구금 위험"을 이유로 북한으로의 여행을 삼갈 것을 자국민에 요청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함.

■ 北매체 “美본토·침략기지 타격권 넣은지 오래” 위협(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7일 6면에 실은 '미제의 핵전쟁 소동에 초강경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군대는 핵전략 폭격기가 이륙하는 꺄도(꺄)의 공군 기지와 핵동력 잠수함이 발진하는 해상 침략기지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대조선 침략 및 병참 보급기지들은 물론 미 본토까지 정밀타격권 안에 잡아넣은 지 오래"라며 미국이 '핵 불장난 소동'에 매달릴수록 '무자비한 핵 불벼락과 최후멸망의 무덤'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같은 면에 게재한 '지역 정세는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력 증강은 명백히 지역의 대국들을 힘으로 누르고 패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 잇속을 챙기려는 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까지 저들의 전략실현에 썩먹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현 집권자(트럼프 대통령)는 (중략) '군사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 핵무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하였다"며 "이것은 절대적인 핵무력 우세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횡포무도한 핵대결 광증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깨끗이 청산될 때까지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3. 9.

■ 미국무부 “북한과 대화 열려 있지만, 의미있는 조치 선행돼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려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및 도발 억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조치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대행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진지한 협상으로 되돌아간다는 목표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그러나 비핵화와 도발 억제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함.

■ 北 통신, 美의 '독재국가' 규정에 “언어도단” 비난(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체질적 거부감과 적대감의 표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 무슨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듯한 '자료'들을 열거(열거)하면서 망탕 짓을 하였다"고 보도함.
- 논평은 "미국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해가며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를 걸고 드는 보고서 발표놀음을 벌이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미국이야말로 사상 최대의 피난민 문제를 산생시킨 인권유린의 왕초"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대북)'제재'로 우리 인민들의 생존권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는 미국은 '인권문제'를 들고나올 초보적인 도덕적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함.

나. 북·중 관계

2017. 3. 6.

■ 中, 북한 미사일 발사에 “유엔 결의 위반 활동 반대”(연합뉴스)

- 경샹(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 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유관 발사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며 북한을 겨냥한 한미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2017. 3. 7.

■ 中 환구시보 “北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 대응용”(연합뉴스)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사평에서 북한은 최근 수년간 미사일 발사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항의해왔다면서 올해는 한번에 4발을 발사해 북한과 한미 간 군사대치가 한층 격화됐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어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구실을 줄 뿐이며 이런 점에 중국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며, 아울러 중국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초래되는 후과를 분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함.

다. 북·일 관계

2017. 3. 6.

■ 日 아베 “北 미사일발사 새로운 위협…NSC 소집 대응”(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오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4발을 발사해 3발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고 밝히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확히 위반한 것으로, 북한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함.
- 총리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를 마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함.

■ 日 방위성 “北미사일, 오기반도 서쪽 300~350km 동해상 낙하”(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6일 오전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동쪽으로 거의 동시에 발사한 미사일 4발이 일본 북쪽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300~350km 동해 상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에 강한 메시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는 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중국과 관련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고립 심화시키는 폭거”…日, 북 미사일 규탄 속 신속 대응(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6일 일본 도쿄 이치가야(市ヶ谷)에 있는 방위성의 한 간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고립을 심화시키는 폭거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가 입수되자마자 총리관저로 들어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대책을 논의했으며, 아베 총리는 이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한 뒤 한국과 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힘.
- 참의원은 아베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마련하도록 이례적으로 회의를 40분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아베 총리는 NSC 개최 후 다시 열린 예산위에 출석해 "북한에 의한 추가 도발 행위에 대비해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에 임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논의 내용을 보고함.

2017. 3. 8.

■ 日 국회, 北 미사일 규탄 결의…“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연합뉴스)

- 일본 참의원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참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항공기 및 선박의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북한의 핵실험 및 되풀이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며 "이는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힘.

라. 북·러 관계

2017. 3. 9.

■ 러 법원, 자국 국경수비대원 폭행 北선원에 4년 징역형(연합뉴스)

- 지난해 극동의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다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북한 선원 1명이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9일(현지시간) 연해주 나훗카시(市) 법원이 러시아 국경수

비대원을 폭행해 뇌손상을 입힌 북한 선원에 대해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3. 4.

■ 中 도착 리정철, 혐의 부인...‘말레이 수사는 北존엄 훼손 음모’(연합뉴스)

- 김정남 암살사건의 용의자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뒤 추방된 북한 국적 리정철(46)이 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는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리정철은 또 말레이시아 경찰이 조작된 증거로 김정남 살인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라고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함.

■ 말레이, 北리정철 블랙리스트 올려...재입국 금지 조치(연합뉴스)

- 4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언론에 의하면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전날 기자들을 만나 "리정철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코 승인한 적이 없는 행위에 연루됐다"며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주장함.
- 그는 "리정철은 달갑지 않은 방문객"이라면서 "우리는 그런 요소가 국내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리정철이 석방된 것은 살인 혐의로 기소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일 뿐 이번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더 많은 이들이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덧붙임.
- 누르 자즐란 모하메드 내무부 차관은 오는 6일자로 파기되는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과 관련해 이미 말레이시아 국내에 있는 북한 국적자들도 전원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힘.

■ 말레이 부총리 “인내심에도 한계 있다”...北 억지주장에 ‘경고’(연합뉴스)

- 4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히드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외교관들은 말레이시아를 그들이 협박해 왔던 다른 나라와 같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말레이시아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힘.
- 자히드 부총리는 김정남의 사인이 VX 신경작용제가 아닌 심장질환이라는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다양한 채널로 입수한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2017. 3. 5.

- **말레이 경찰, “경찰이 가족살해 협박” 北리정철 주장 일축(연합뉴스)**
 -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애초 살인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구금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라면서 "리정철은 다른 용의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함.

- **“북한, 제재 회피에 아프리카 주로 이용”…유엔 보고서 분석(연합뉴스)**
 -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유엔의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해 8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향하던 화물 선박에서 철광석 밑에 숨겨진 북한산 로켓 추진 수류탄 3만개가 적발돼 압수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하며, 아프리카 전역에서 대체로 대북제재 이행 정도가 느슨한 편이라고 보도함.

- **말레이 부총리 “강철대사 추방, 北에 ‘김정남사건 호도말라’는 뜻”(연합뉴스)**
 -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5일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의 추방에 대해 "사건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는 뜻으로, 북한 정부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라고 주장함.
 - 그는 김정남의 사망이 북한 '내부 문제'에 해당한다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 정부는 이번 살인사건의 국제적 영향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북한은 다른 나라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건을 호도하려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신 상호협력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함.

2017. 3. 6.

- **北리정철, 외신활용 ‘아전인수’ 여론전…“말레이, 자백 강요해”(연합뉴스)**
 - 6일 일본 NHK는 리정철이 인터뷰를 통해 김정남과 관련해선 "알지 못한다"면서 "(말레이시아 경찰에)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날조하지 말라'고 했다"며 "(말레이시아 경찰에) '너희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와서 자백하라고 했다. 죄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보상하라'고 했다"고 보도함.

■ **이탈리아 외교부 “北미사일 발사, 세계 평화·안보 위협”(연합뉴스)**

- 이탈리아 외교부는 6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외교부는 이어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과 고립을 자초하는 노선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탈리아는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단호한 대응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임.

■ **北, 말레이 대사 ‘맞추방’ 결정…양국 극한 외교대립(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주북한 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주조(주북한) 말레이시아 특명전권대사를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환영할 수 없는 인물'(persona non grata, 기피인물)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리면서 2017년 3월 5일(일요일) 10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2017. 3. 7.

■ **EU·英·伊 “北 미사일 발사 즉각 중단하고 대화 복귀해야”(연합뉴스)**

- 유럽연합(EU)과 영국, 이탈리아 정부 등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복귀할 것을 요구함.
-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북한은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비난한다"고 규탄하며 북한에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대신 자국민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책임있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함.
- 이탈리아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과 고립을 자초하는 노선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함.

■ 크렘린 “北미사일 발사 심각히 우려…긴장고조 행동” 비난(연합뉴스)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6일(현지시간) 기자들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러시아도 당연히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이는 역내의 추가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다"고 지적함.
-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프란츠 클린체비치는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로 인해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난함.
-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특히 6일 이루어진 탄도미사일 4기 연쇄 발사라는 뻔뻔스러운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대한 직접적 위반일 뿐 아니라 현존하는 국제법 시스템에 대한 의도적 도발"이라고 비판함.

■ 말레이 정부, 北 미사일 발사 규탄…“유엔 결의 준수하라”(연합뉴스)

-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북측이 이날 오전 탄도미사일 네 발을 쏘아올린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이는 비핵화와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런 행동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및 안보를 무시한다는 점을 재차 보여줬다"면서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함.

■ 유엔, 北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 개탄”(연합뉴스)

-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음.
- 하크 부대변인은 "북한 정권은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국제적 책무를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도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함.

■ 나토 “北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北, 대화 복귀해야”(연합뉴스)

- 유럽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6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 미사일 4발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으며, 나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특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은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판함.

- 작년 12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파트너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북한 핵 관련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대화에 즉각적으로 다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 말레이 보건장관 “北, 부검도 않고 심장마비 주장…이해 인돼”(연합뉴스)

-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브라마니암 사타시밤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법의학 팀의 보고에 따라 우리는 (김정남의) 사인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이미 배제했다"고 하며 "현재 중요한 것은 신원확인이며, 사인은 이미 쟁점이 아니다"라면서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는 신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북한 대표단의 리동일 전 북한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의 김정남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부검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부검을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 그가 어떻게 순전히 추정만으로 그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함.

■ 北, 자국내 말레이시아 국민 출국 임시금지(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의례국은 7일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선(북한) 경내에 있는 말레이시아 공민들의 출국을 임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조 말레이시아대사관에 통보했다"며 "(기한은)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어 말레이시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들과 공민들의 안전담보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보도함.

■ 北역류맞선 말레이, 北대사관 전직원 출국금지…대사관주변 폐쇄(연합뉴스)

- 말레이시아가 7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 및 관계자의 출국을 전격 금지함.
-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출국 금지는 오직 북한대사관 관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다른 북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그는 이번 조치가 북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오는 10일 내각 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北역류 맞선 나집 총리 “말레이 내 모든 북한인 출국금지 지시”(연합뉴스)**

- 나집 라작 총리는 7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들의 안전을 확신할 때까지 말레이시아 내 모든 북한인의 출국을 막으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함.
- 나집 총리는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은 이런 혐오스러운 조치는 국제법과 외교 관행들을 총체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에 출국금지 조치의 즉각 해제를 촉구하며,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필요한 어떤 조치도 망설이지 않고 취하겠다"고 강조함.

■ **“말레이 10일 내각회의서 북한과 단교 정식검토”(연합뉴스)**

-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오는 10일 내각회의를 소집해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인 말레이 메일 온라인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또 다른 현지 매체인 '더 스타'는 용 카 추안 국제통상산업부 제2 장관의 "현재로써 내각 결정이 없으면 교역은 그대로일 것"이라며 "매우 새로운 사태가 전개돼 그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 이번 내각회의에서 북한과의 교역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보도함.

2017. 3. 8.

■ **유엔 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연합뉴스)**

-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갈수록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안보리는 8일 오전 10시(한국시간 9일 0시)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성명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날 성명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함.

■ **말레이 총리 “북한과 단교 계획은 없어”...협상모드 전환(연합뉴스)**

- 나집 총리는 8일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

- 기 때문에 북한과 단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함.
- 나집 총리는 "우리는 북한에 친절한 국가"라며 "싸움을 걸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 그것도 화학 무기를 사용한 범죄가 일어난 만큼 말레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북한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아세안 10개국, 北미사일 발사에 우려 표명…“유엔결의 지켜라”(연합뉴스)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함.
- 아세안 10개국 장관은 8일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아세안은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올해 들어서만 두번째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세안은 역내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임.

2017. 3. 9.

■ 유엔 주재 佛대사 “EU 대북제재 추가 검토”(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독자적으로 추가 대북제재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함.
- 프랑수아 들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언론에 "비이성적 행동을 하는 정권을 처벌해야 하며 이 정권이 생각하는 비용 우위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프랑스와 EU 회원국들의 대북제재안 논의 사실을 공개함.
- 또한 "프랑스는 EU의 대북제재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유엔 안보리도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온전히 이행되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엔서 비동맹운동 북한 지지성명 ‘불발’…“10여개국 반대”(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동맹운동에 대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자국의 핵 보유 정당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채택할 것을 제의했으나, 일부

회원국이 반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짐.

- 8일(현지시간) 유엔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3일 비동맹운동 회원국들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해줄 것을 제의했으나 "성명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게 관례인데 북한의 이번 제의에는 10여 개 회원국이 반대했고, 성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전함.

■ 유엔 “북한 억류 말레이 직원 2명 베이징 도착”(연합뉴스)

- 북한이 억류한 말레이시아 국민 11명 가운데 2명이 풀려났다고 AFP통신이 9일 보도함.
- AFP통신은 북한에 있던 말레이 국적의 세계식량계획(WFP) 직원 2명이 북한을 떠나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유엔이 확인했다고 전함.
- 유엔 WFP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직원들은 국제 관리로 자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들은 북한에서 WFP 프로그램을 수행했다"며 이들이 북한에서 빠져나왔다고 밝힘.

■ “이탈리아, 北외교관 승인 보류…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연합뉴스)

-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이탈리아가 최근 유엔에 제출한 6쪽짜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함.
- 보고서는 "로마 주재 북한 외교공관의 현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accreditation) 절차가 지난해 12월부터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함.
- 이탈리아는 또 북한 국적자에게 핵과 관련한 과학기술을 전수할 수 없다는 2321호 규정에 따라 핵 연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국 내 북한 유학생 5명의 전공을 강제로 바꾸도록 조치했으며, 사치품 규제를 위해 지난해 11월 북한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던 다이빙용 오리발 7개를 적발해 압류했으며, 이 물품을 수출하려던 자국 국적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함.

2017. 3. 10.

■ 말레이 “DNA검사 없이는 김정남 시신 인도 못해” 입장 재확인(연합뉴스)

- 10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사망사

- 건의 경우 처리시한이 있지만, 이 사건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DNA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정남의) 가족은 현재 해외에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DNA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발언함.
-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김정남 가족의 소재지와 관련해선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발언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3. 7.

■ 北 “주일미군기지 타격 탄도로켓 훈련…무자비한 핵강타”(연합뉴스)

- 북한은 주일 미군기지 타격 임무를 맡은 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며 훈련에 '유사시 일본 주둔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함.

■ 北, 이동식발사대로 논바닥에서 미사일 발사 사진 공개(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며 1면과 2면에 관련 컬러사진 총 13장을 게재함.
- 사진에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뒷짐을 진 채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김정은을 기준으로 그의 왼쪽에는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오른쪽에는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이 양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고, 뒤편에는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의 모습이 보임.
- 신문의 1면 하단에는 미사일 발사 당시의 사진들이 실렸는데 사진이 작아 잘 식별되지는 않지만, 미사일의 종류는 북한이 지난해 9월에도 발사했던 스커드 ER과 흡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사는 논바닥 한가운데서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4발의 미사일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채 1~2초 간격으로 거의 동시에 점화된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은 발사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탄도 로켓들이 얼마나 고도로 정밀한 지 동시발사된 4발의 탄도 로켓들이 마치 항공교예비행대가 편대비행을 하듯 한모양새로 날아간다"고 말하며, 발사에 성공하자 박수를 치면서 기쁨을 나타냈고 발사훈련을 주관한 북한군 전략군 화성포병들과 기념사진도 촬영함.

■ 美언론 “北 발사 미사일 4발 아닌 5발…1발 실패”(연합뉴스)

- 북한이 6일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5발이었으며 그중 1발은 발사에 실패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함.
-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고 4발이 바다에 낙하했다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더 많은 수의 발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함.
- 데이비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북한의 오랜 도발적 행위가 일관되게 지속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핵전투부 취급훈련’ 첫 언급…“핵탄두 조립·탑재능력 과시”(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이번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전략군 화성 포병들의 핵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고 밝힘.
- 덧붙여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주체적 로켓 타격전법'을 완성했다며 훈련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했는데 "당 중앙이 명령만 내리면 즉시 즉각에 화성포마다 멸적의 불줄기를 뿜을 수 있게 기동준비,진지준비,기술준비,타격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명령하시었다"고 보도함.

■ 北,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발사 훈련 영상 공개(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6일 시험 발사한 스커드 개량형 탄도미사일 네 발의 시험발사 영상을 7일 공개함.
- 영상은 카운트다운 뒤 네 발의 미사일이 각자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장면 등 약 2분 20초 분량인데, 각 미사일은 1~2초 간격으로 거의 동시에 발사됐으며, 논바닥 한가운데 있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의 모습도 선명하게 보임.
- 중앙TV는 이어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각각 발사되는 장면, 검은색 코트를 입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흰 포연을 바라보는 모습, 김정은이 모니터를 가리키는 모습, 김정은이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 등과 서 있는 모습, 김정은이 손을

들어 장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공개함.

2017. 3. 8.

■ 美언론 “北, ‘북극성 2형’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 중”(연합뉴스)

- 지난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북한이 '북극성 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추가 발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BS뉴스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북수의 미 국방부 관리들은 CBS에 전날 북한이 '미사일 사출 시험'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하며, 이는 북한이 지난달 12일 발사한 북극성 2형의 추가 발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인다고 밝힘.
- 관계자들은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으로 추정되는 엔진 시험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함.

2017. 3. 9.

■ 유엔 보고서 “북한, 핵 원료 ‘리튬6’ 해외에 팔려고 했다”(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핵심 원료인 '리튬6'를 해외에 팔려고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함.
- 유엔 보고서는 북한 국영 '청송연합'이 운영하는 위장 회사가 리튬6를 주중 북한 대사관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를 통해 팔려고 한 것으로 추정함.

2017. 3. 10.

■ 美 38노스 “北 핵실험장 활동 계속·6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연합뉴스)

- 38노스는 9일(현지시간) 지난 7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갭도 입구에 대형 선적용 컨테이너로 보이는 물체가 등장했다고 밝힘.
- 38노스는 "눈이 눌러서 생긴 흔적을 보면 장비와 물자 저장소에서 지원 건물과 터널 사이를 차량이 오갔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지난달 18일과 21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북쪽 갭도 야적장에 5m 길이의 트럭과 물자들이 있었으나, 이번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함.
- "지휘통제소 앞 야적장의 눈은 치워진 상태이며, 트럭 한 대가 등장했다"고 덧붙였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일련의 움직임과 최근에 포착된 활동들을 종합하면,

풍계리에서는 핵 장치와 관찰 장비만 설치된다면 비록 촉박하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강조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3.4		NYT "美백악관 회의서 韓 핵무기 재배치 논의...대북경고용"(연합뉴스)
	3.6	한미일 장관·6자수석 연쇄통화... "北미사일 긴밀 공조"(연합뉴스)	백악관 "北미사일방어 강화위해 한국에 사드배치 등 조치"
	3.7	한미, 북한 도발 국면서 최고위 소통로 건재 확인(연합뉴스)	
		사드, 이르면 4월 국내 실전운용...발사대 2기 도착(연합뉴스)	
		한미일 국방당국 "北 미사일 발사 규탄...대북공조 강화"(연합뉴스)	
3.9	韓·美 통상장관 상견례... "한국기업 미국투자 늘 것"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3.3		"한국관광 금지하라" 베이징서 中전역 확대...中여유국 구두지시(연합뉴스)
	3.4	中 사드 보복 노골화에 주중대사관 '대책반' 긴급 가동(연합뉴스)	
	3.5	윤병세, 中사드보복 "WTO·한중FTA 규정 저촉 가능성"(연합뉴스)	
		산업부 장관 "中정부가 현지 투자 한국 기업 보호해야"(연합뉴스)	
		주중공관들, 中의 '韓관광 중단'에 "직접 비자신청 받겠다" 맞불(연합뉴스)	
			北에 군대 주둔도 주장하는 중국... "황해도에 反사드미사일 배치"(연합뉴스)
	3.7	외교부 "중국내 '사드보복' 동향 점검 강화"(연합뉴스)	
			中외교부 "한국 사드배치 결연히 반대...필요한 조치할 것"(연합뉴스)
		"中 해커조직 한국·롯데 상대 정식 공격 선언"(연합뉴스)	
3.8		"北도, 韓美도 모두 잘못"이라는 中양	

			비론...反사드 총력전인듯(연합뉴스)
	3.9		'조여오는 中 사드 보복' 제주 직항 정기편 운항도 '흔들'(연합뉴스)
			"한국 애니메이션도 오지마"...중국 난데없는 불허 통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3.7	韓日 외교·국방 연쇄통화...경색에 소통로 뚫리나(연합뉴스)	
	3.8		日관방,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추진에 '발끈'(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3.7		러 외무부 "北미사일 발사, 한미연합훈련 모두 긴장고조행위"(연합뉴스)
			러 의회, 사드 한국 배치착수에 반발... "러 안보에 직접 위협"(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3.7	미·중 정상회담으로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 수그러들 전망(연합뉴스)	
	3.7	트럼프의 對중국 무역보복카드는...옷부터 철강·전자제품까지(연합뉴스)	
	3.8	백악관 "中 사드 우려 이해하나 韓·日엔 국가안보 문제"(연합뉴스)	
	3.9	美 '모든 대북 옵션 검토...핵심은 中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3.4	"틸러슨 美국무, 한중일 3국 순방...中에 사드 이해 구할것"(연합뉴스)	
	3.8	미일 정상 "北위협 새로운 단계"... 한미일 공조로 대북대응 확인"(연합뉴스)	
	3.9	주일미군,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모든 사태 상정해 대응"(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3.7	미·러 軍최고지휘관 터키서 회담..."시리아·이라크 사태 논의"(연합뉴스)	
	3.9	美 "러 신형순항미사일 배치...핵미사일 위반"(연합뉴스)	러시아 조약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3.5		군사강국 질주 日, 中 국방비 증액에 "국제사회 우려" 경계감(연합뉴스)
	3.7		대만, 일본내 대표기관에 '대만' 표기 추진...中 반발할 듯(연합뉴스)
	3.8		日관방 "안보리 대북 규탄성명 환영...중국이 역할 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3.8		中관영매체 "어렵지만 美에도 사드 보복...러시아와 힘 합쳐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3.8	日·러, 내주 쿠릴 공동경제활동 첫 협의...어업·관광 공동조사(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3. 4.

■ NYT "美백악관 회의서 韓 핵무기 재배치 논의…대북경고용"(연합뉴스)

-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는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렸고, 회의에서는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으며, 이 중에는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전함.
-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북한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현재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됨.
-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것은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과 다름없고, 중국을 압박한 북·중 교역 제한도 중국이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준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가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북경고용'으로서 효과가 크다는 주장임.

2017. 3. 6.

■ 한미일 장관 6자수석 연쇄통화…"北미사일 긴밀 공조"(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연쇄 발사가 확인된 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함.
- 이와 함께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연쇄적으로 긴급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2월12일 탄도미사일 발사 및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함.

2017. 3. 7.

■ 백악관 "北미사일방어 강화위해 한국에 사드배치 등 조치"(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 상에 발사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사드' 포대의 배치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함.
- 미 백악관 대변인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입장을 이같이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임.
- 스피어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오래된 도발적 행동이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러한 도발은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함.

■ 한미, 북한 도발 국면서 최고위 소통로 견제 확인(연합뉴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한미간 최고위 소통로가 견제함을 확인한 일로 평가함.
-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6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압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다음 날 한미 양국의 최고위급이 직접 소통한 것임.
- 미국의 국무·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등 한반도 라인 핵심인사의 인선이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에 고위급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7일 평가함.

■ 사드, 이르면 4월 국내 실전운용...발사대 2기 도착(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함.
-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힘.
- 이들은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로, 지난 6일 밤 미군 C-17 수송기 1대로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겨졌고,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 **한미일 국방당국 "北 미사일 발사 규탄...대북공조 강화"(연합뉴스)**

-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은 8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은 오늘 북한의 3월 6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화상회의를 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화상회의에는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 대리,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 대표로 참석했고,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함.

2017. 3. 9.

■ **韓·美 통상장관 상견례...“한국기업 미국투자 늘 것”(연합뉴스)**

-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지난달 28일 취임한 로스 장관을 만남.
- 양측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전, 3차원(3D) 프린터 등과 관련한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함.

나. 한·중 관계

2017. 3. 3.

■ **“한국관광 금지하리” 베이징서 中전역 확대...中여유국 구두지시(연합뉴스)**

- 3일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여유국도 이날 주요 여행사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고 구두 지시하고, 관련 지침 7개 항목을 각 여행사에 공지함.
- 중국 관광객의 최다 송출지인 상하이(上海), 장쑤(江蘇)성 등 동부지역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상품 취급을 중단함에 따라 한국행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는 급감할

전망임.

- 이에 관한 공식 문건이 없으므로 중국 측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2017. 3. 4.

■ 中 사드 보복 노골화에 주중대사관 '대책반' 긴급 가동(연합뉴스)

-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지난 3일 최영삼 정무 1공사를 대책반장으로 하는 종합 안전 대책반을 발족한 뒤 1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중국 내 사드 보복과 관련한 교민, 유학생, 관광객 등 국민의 안전 확보책을 논의하고 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점검했음.
- 주중대사관은 지난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교민들의 대중 밀집 지역 및 유흥업소 출입 자제, 중국인과의 접촉 시 불필요한 논쟁 및 마찰 유의, 비상연락망 유지 등을 안내했음.
- 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사드와 관련해 중국 내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면서 "교민, 기업, 대사관 간에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2017. 3. 5.

■ 윤병세, 中사드보복 "WTO·한중FTA 규정 저촉 가능성"(연합뉴스)

- 윤 장관은 5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 중국당국의 한국여행 금지에 대해 "대체로 그런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공식적으로는 중국당국이 부인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인적교류에 대해 인위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음.
- 윤 장관은 지난달 독일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도 "다보스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세계화와 보호주의 반대에 대해 강하게 연설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런 중국 측 대외적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소개함.
- 그는 중국의 반발에도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되도록 사드배치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국방당국은 최대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5~7월에는 사드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산업부 장관 "中정부가 현지 투자 한국기업 보호해야"(연합뉴스)**

-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지난 3일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 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함.
- 산업부는 오는 9일로 예정된 민관 합동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7일로 앞당기고 '사드 보복'에 따른 전 업종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음.
-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주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함.

■ **주중공관들, 中의 '韓관광 중단'에 "직접 비자신청 받겠다" 맞붙(연합뉴스)**

-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중국 당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키로 한 것에 대응해 중국 내 우리 공관들이 한국방문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개별 비자를 직접 접수하기로 했음.
- 이는 중국의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이 자국 여행사들에 한국 관련 상품을 취급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이들 여행사를 통한 비자신청은 중단되겠지만, 개별 비자 발급의 숨통을 터놓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로 보임.
- 주중 대사관 측은 아울러 "신랑(新浪·시나)이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빠르게 유포되는 '한국 비자 발급 중단' 소식은 근거가 없는 허위며 한국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음.

■ **北에 군대 주둔도 주장하는 중국... "황해도에 반사드미사일 배치"(연합뉴스)**

- 5일 환구망, 쉰우후(搜狐)군사 등 인터넷매체에 올라와 있는 국군의 장성급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 글은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사드 견제는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는데 활용되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확보하는 군사행동이 될 것이라고 강변함.
- 이어 "이 기회를 빌어 북중동맹의 회복, 중국군 주둔, 동북아 전략구도 재편에 나서려면 먼저 관영매체를 통해 사드 반대 주장을 고조시켜 여론의 기초를 닦은 다음 유엔 등등에서 전방위 항의를 통해 국제적 관심을 끌어 모아 각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음.

2017. 3. 7.

■ 외교부 "중국내 '사드보복' 동향 점검 강화"(연합뉴스)

-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개 착수(6일)를 계기로 중국에서 이뤄지는 보복성 조치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사드 보복)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면서 피해업계 지원, 시장 다변화 측면지원 등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조 대변인은 이어 "WTO와 한중 FTA 등 규범에 관한 법적 절차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소개함.

■ 中외교부 "한국 사드배치 결연히 반대...필요한 조치할 것"(연합뉴스)

- 경쑹(耿飫)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가 사드 배치를 위한 일부 장비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의 입장을 묻자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자신의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힘.
- 경쑹 대변인은 이어 "필요한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유관 측이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롯데에 대한 제재와 중국과 한국 간 전세기 불허가 사드와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걸 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앵무새' 답변을 반복함.

■ "中 해커조직 한국 롯데 상대 정식 공격 선언"(연합뉴스)

- 3일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중국 해커들이 공식적으로 한국과 롯데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이들이 롯데의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에 반대에 행동에 나섰다"고 전하는 글이 오르고 있음.
- 이들은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优酷)에 올린 영상을 통해 영어로 자신들을 '중국

해커라고 소개한 뒤 "지금부터 시작해 우리 중국 해커들은 정식으로 한국에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힘.

- 이들은 "롯데의 사드부지 제공은 한국이 정식으로 중국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의미"라면서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지만 한국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치 않고 있다"고 주장함.

2017. 3. 8.

■ "北도, 韓美도 모두 잘못"이라는 중앙비론...反사드 총력전인듯(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8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은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도 군사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함.
- 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드배치의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마치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스러움.
- 아울러 왕 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정당한 방어훈련인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한반도 사드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 데서 중국의 초조함도 드러나 보임.

2017. 3. 9.

■ '조여오는 中 사드 보복' 제주 직항 정기편 운항도 '흔들'(연합뉴스)

- 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와 한국 국적 항공사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제주~중국 22개 노선(홍콩 포함) 출도착 1천254편을 운항할 예정임. 이는 지난달 1~28일 제주에서 중국으로 오가는 24개 노선에 운항한 1천363편에 견줘 8%(109편) 감소함.
- 길상항공이 상하이 노선을 주 9회에서 주 2회로 줄이고, 닝보(주 2회), 항저우(주 3회) 정기편은 운항 중단기로 했고, 전달 나흘간 운항을 중지했던 푸둥 노선에서는 이달에는 4일 더 많은 여드레 동안 운항하지 않음.
- 제주도에 따르면 남방항공의 선전~제주 노선은 애초 10월까지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4월부터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용객의 항공좌석 예약금을 여행사 측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애니메이션도 오지마"…중국 난데없는 불허 통보(연합뉴스)**

- 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 따르면 오는 4월말 열리는 중국 항저우(杭州)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주최 측은 지난 8일 한국관의 설치와 한국업체에 대한 시설 대여를 불허하는 통보를 함.
- 콘진원 관계자는 "어제 연락을 받고 우리도 굉장히 당황한 상태"라며 "소방 안전 관리법을 이유로 드는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힘.
- 이어 "우리를 비롯해 27개 업체가 항저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준비해왔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 논의 중이나 뾰족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고 토로함.

다. 한·일 관계

2017. 3. 7.

■ **韓日 외교·국방 연쇄통화…경색에 소통로 뚫리나(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7일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음.
- 한 장관은 통화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이나다 방위상은 "한·일,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한 엄중한 안보 상황 아래 최근 양국관계에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협력하자는 데 두 장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017. 3. 8.

■ **日관방,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추진에 '발끈'(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외교 루트로 강하게 요청,

당연히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또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시기와 관련해서도 "귀임일은 미정"이라며 "향후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음.
- 스가 장관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주한대사의 부재로 한일 협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한일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했고 외교장관이 회담하는 등 그런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라. 한·러 관계

2017. 3. 7.

■ 러 외무부 "北미사일 발사, 한미연합훈련 모두 긴장고조행위"(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6일 저녁(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보실 명의로 논평을 내고 "오늘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공격 작전을 염두에 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개시 등으로 더욱 긴장된 한반도 정세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외무부는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모든 관련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추가적 긴장 고조가 역내 안보 및 안정에 미칠 부정적 결과를 심각하게 숙고하길 촉구한다"고 호소함.
- 이런 외무부 논평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과 미 사드(THAAD) 시스템의 한국 배치 등 군사적 대응에 반대해온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됨.

■ 러 의회, 사드 한국 배치착수에 반발... "러 안보에 직접 위협"(연합뉴스)

-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레오니트 슬루츠키 위원장은 "미국은 사드 시스템이 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시스템은 북한 위협 억제 과제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며 역내 전략균형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빅토르 오제로프도 "사드 시스템 배치는 러시아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라면서 "총참모부가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결론을 내리고

- 대응 조치에 대해 국가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힘.
-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제1부위원장 프란츠 클린체비치도 "미국은 러시아의 강력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 알면서도 한국으로의 사드 배치를 강행한 점이 주목된다"며 "이는 미국 군사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며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3. 7.

■ 미·중 정상회담으로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 수그러들 전망(연합뉴스)

-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주요국간 정치·외교적 공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미·중 간 협력 여부에 따라 중국의 대 한국 경제적 보복 양상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연구원은 중국의 대 한국 중간재 수요가 커 중국도 무역제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역분야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광분야는 지금처럼 한국 관광 제한이 심화하면 대중 서비스 수지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외교 및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에서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함.

■ 트럼프의 對중국 무역보복카드…옷부터 철강·전자제품까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버 로스 상무장관이 인준을 마침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위협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음.
-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팀이 보복 공약을 지키게 된다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5개 품목이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함.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의 투 신촨 교수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농산물과 항공기, 자동차와 같은 미국이 민감해 하는 품목을 택해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함.

2017. 3. 8.

■ 백악관 "中 사드 우려 이해하나 韓·日엔 국가안보 문제"(연합뉴스)

- 손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반대와 관련해 "중국의 우려를 분명히 이해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에 국가안보 문제"라며 배치 계획에 흔들림이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함.
-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양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대행은 브리핑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나쁜 행동(Bad behavior)'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힘.

2017. 3. 9.

■ 美 '모든 대북 옵션' 검토...핵심은 中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음.
- 헤일리 대사가 말한 '모든 옵션'은 대북 선제타격과 한국으로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대북 협상 등 좌우 양 끝에 있는 조치까지 포함, 미국 정부의 유무형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지적함.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옵션' 가운데, 현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방안으로 좁히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거기엔 선제타격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 대북 협상 등은 들어갈 공산이 크지 않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음.

나. 미·일 관계

2017. 3. 4.

■ "틸러슨 美국무, 한중일 3국 순방...中에 사드 이해 구할것"(연합뉴스)

-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도발 위협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사드) 배치 문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틸러슨 장관의 첫 동북아 순방 외교의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짐.
- 틸러슨 장관은 또 중국을 방문해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고, 그는 방중 일정 동안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는 중국에 이해를 구하고 대북 공동 압박 방안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임.

- 톨러슨 장관은 오는 17~18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회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방일 시점을 논할 것이고, 니혼게이자이도 톨러슨 장관이 북한 정세를 긴급히 협의하려 이 이틀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아베 신조 총리와 기시다 외무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함.

2017. 3. 7.

■ 미일 정상 "北위협 새로운 단계"...한미일 공조로 대북대응 확인(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 "100% 일본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베 총리가 밝힘.
- 이는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북형 김정남 암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수위 고조에 대해 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 이날 통화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확인함.

2017. 3. 8.

■ 주일미군,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모든 사태 상정해 대응"(연합뉴스)

-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沖縄)에 주둔하는 미군의 최고 책임자인 로렌스 니콜슨 오키나와지역조정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모든 사태를 상정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임.
- 이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주일미군 기지 타격 훈련이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데 대한 주일미군의 첫 공식 입장임.

다. 미·러 관계

2017. 3. 7.

■미·러 軍최고지휘관 터키서 회담…“시리아-이라크 사태 논의”(연합뉴스)

- 터키군은 7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이 안탈리아에서 홀루시 아카르 터키군 총사령관을 만난다고 밝히고, 성명에서 "지역 안보, 특히 시리아-이라크와 관련한 공동 관심사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함.
- 터키군을 등에 업은 시리아반군과 시리아민주군이 이달초 만비즈 외곽에서 충돌한 후 미군은 만비즈에 전력을 보강했으며, 러시아는 시리아민주군과 협의를 거쳐 군이 호송하는 '구호대'를 이곳에 급파함.
- 미국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6일, 동맹세력인 터키군과 시리아민주군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IS 격퇴전에 집중하도록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만비즈에 병력을 증강 배치했다고 설명함.

2017. 3. 9.

■美 "러 신형순항미사일 배치…핵미사일 조약 위반"(연합뉴스)

-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합동참모본부(JCS) 부의장 폴 쉘바는 8일(현지시간)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연설하며 러시아의 신형 순항미사일 배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함.
- 쉘바 부의장은 "이 시스템은 그 자체가 유럽 내 다수의 미국 군사시설에 위협이 된다"며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나토 시설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그는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배치는 INF의 정신과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미국도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함.

라. 중·일 관계

2017. 3. 5.

■군사강국 질주 日, 中 국방비 증액에 "국제사회 우려" 경계감(연합뉴스)

-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중국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위안(약 16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군사비 확대는 이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우려돼 왔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함.
-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방위비 예산을 5년 연속 증가시켜 2017년도에 사상 최대인 5조1천251억 엔(약 51조4천580억 원)으로 편성한 상태임.
 - 자민당 관계자는 "중국은 군사력을 현대화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도 방위비 증액에 더해 방위계획도 앞당겨야 한다"고 신문은 언급함.

2017. 3. 7.

■ 대만, 일본내 대표기관에 '대만 표기 추진' 중 반발할 듯(연합뉴스)

- 7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자유시보 등은 전날 입법원(국회)에 참석한 리다웨이(李大維) 외교부장이 일본 주재 대만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주일경제문화대표처'의 명칭을 '대만주일경제문화대표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리 부장은 일본에 설치된 동아시아관계협회의 개명안을 입법원에 이미 제출했다면서 3월 말까지 '대만일본관계협회'로 바꾸겠다고 밝힘.
- 청융화(程永華) 주일본 중국 대사는 지난 3일 일본이 '교류협회'의 명칭을 '일본대만교류협회'로 개명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고, 아울러 장즈궈(張志軍) 중국 대만관공실 주임은 6일 인터뷰에서 "대만 정부가 독립의 길을 걷는다면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음.

2017. 3. 8.

■ 日관방 "안보리 대북 규탄성명 환영...중국이 역할 해야"(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긍정 평가하며 중국의 역할을 주문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성명을 채택한데 대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일치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함.
- 그는 이어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함.

마. 중·러 관계

2017. 3. 9.

■ 中관영매체 "어렵지만 美에도 사드 보복··러시아와 힘 합쳐야"(연합뉴스)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9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처음 추진했고, 가장 큰 지지자"이라며 미국에 대한 사드 보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환구시보는 이어 "사드의 목적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억제에 있는 만큼 중국의 핵 위협력을 증강해 이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역설함.
-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맞서 강력한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면 미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조함.

바. 일·러 관계

2017. 3. 8.

■ 日·러, 내주 쿠릴 공동경제활동 첫 협의··어업·관광 공동조사(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가 오는 18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의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첫 협의에 나선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음.
- 일본은 도쿄에서 열리는 첫 협의에서 주변 수역의 어장환경과 동식물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할 방침이고, 협의에는 두 나라의 외무, 경제산업, 국토교통, 농림수산 관련 부처 간부가 참가함.
- 일본은 러시아가 제안에 응하면 연내 공동 조사를 시작해 공동경제활동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3.4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北 관리소에 8만~12만명 구금"(연합뉴스) 美 "北 노동자 5만~8만 명 27개국서 강제노역"(연합뉴스)
	3.7	"유엔, 북 인권 책임자 처벌 계속 추진을"(자유아시아방송)
	3.8	ICNK '북한인권 범죄 다룬 특별 국제법정 지지(미국의 소리)
	3.9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상황 중대한 우려"(연합뉴스) 영국 대학, 탈북여성 인신매매 증언(자유아시아방송)
	3.10	北인권 전문가그룹 유엔서 김정은 정권 처벌 논의(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3.6	이성호 인권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北 인권 논의"(연합뉴스)
	3.7	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北인권 증진방안 논의(연합뉴스) 아산정책연구원 "北교화소수감자 넷 중 한명꼴 병으로 죽어 나온다"(연합뉴스)
	3.9	"북한 여성, 존중 받지 못해"(자유아시아방송)
	3.10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비판 "김정남 암살, 정권 성격 보여줘"(미국의소리)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3.5	통일부, 북한고급정보 보상금 4배 인상... 고위급 탈북민 유도 목적 분석(연합뉴스) 한국 정부, 북한고급정보 보상금 4배 인상(미국의 소리)
	3.6	탈북자단체, 美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서한(연합뉴스)
	3.8	통일부 "보로금뿐 아니라 다른 정착지원예산도 증액 계획"(연합뉴스)
대북지원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3. 4.

■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北 관리소에 8만~12만명 구금”(연합뉴스)

-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 총평에서 "북한 정권은 언론, 집회, 결사, 종교, 거주, 노동의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 많은 측면에서 주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가혹한 여건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 하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무부는 아울러 북한에는 관리소와 교화소, 교양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구류장(또는 감옥) 등 6개 형태의 구금시설이 있다고 소개하고, 통일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관리소당 5천~5만 명, 총 8만~12만 명이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 美 “北 노동자 5만~8만 명 27개국서 강제노역”(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각) 발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실태를 고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4일 보도함.
- 보고서는 "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들이 27개국(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때로는 2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평균임금은 월 300달러에서 1천 달러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금의 70%에서 90%를 북한 당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실제로는 한 달에 10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이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2017. 3. 7.

■ “유엔, 북 인권 책임자 처벌 계속 추진을”(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로버트슨 부국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산하 서울 유엔인권 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Seoul)가 북한의 인권 유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 참상과 강제 노역 등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자료를 평가, 분석해 형사처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2017. 3. 8.

■ ICNK ‘북한인권 범죄 다룬 특별 국제법정 지지’(미국의 소리)

-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7일 언론보도문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 유엔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특히 전문가그룹이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 외에 특별 국제법정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점을 강조함.
- ICNK는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지지했다고 밝혔음.

2017. 3. 9.

■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상황 중대한 우려”(연합뉴스)

-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자이드 대표는 이런 상황이 빨리 바뀔 필요가 있다며,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유엔 전문가그룹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지난해 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신설된 전문가 그룹은 이번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음.

■ 영국 대학, 탈북여성 인신매매 증언(자유아시아방송)

- 세계 여성의 날 행사의 하나로 영국 요크 대학교에서 여성들의 인신매매, 노예제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유엔 협회와 유엔 여성 단체들 연계로 워크숍이 열렸으며, 이 행사에 영국에서 북한여성의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

여성이 참여하여 인권 침해 피해 당사자로서의 증언과 향후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2017. 3. 10.

■ 北인권 전문가그룹 유엔서 김정은 정권 처벌 논의(연합뉴스)

- 북한 인권 전문가그룹인 현인그룹(The Sages Group)이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향과 김정은 정권의 형사 처벌 문제를 논의함.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의 부대 행사)
- 참석자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남 암살은 북한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지 각인시킨 사건이었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을 ICC, 유엔 임시 재판소에 회부토록 권고한 2014년 'COI 보고서'와 최근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유엔인권이사회(UNHRC) 독립전문가 그룹의 보고서 이행 방안을 논의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3. 6.

■ 이성호 인권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 방문…“北 인권 논의”(연합뉴스)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인권위가 6일 전함.
- 이 위원장은 3일 실비아 페르난데스 ICC 소장과 면담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과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이행방안을 논의했음.
- 이 위원장은 COI와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ICC 관할권 확대를 통한, 유엔 차원의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2017. 3. 7.

■ 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北인권 증진방안 논의(연합뉴스)

- 정부는 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 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함.
- 김형석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고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북한 인권 관련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올해 집행계획에 대한 협의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올해 집행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회의체임.

■ 이산정책연구원 “北교화소수감자 넷 중 한명꼴 병으로 죽어 나온다”(연합뉴스)

- 이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 비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02~2012년 전거리 교화소에서 수감을 경험한 20명 면담자가 (교화소 내에서) 관찰한 276명의 사망 비율은 24.3%에 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2002~2012년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 주민 20명과 진행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음.
- 사망한 대상자가 생존 시 앓고 있던 질병(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영양부족(80.3%)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감염성 질환(53%), 소화기계 질환(25.8%), 호흡기 계통 질환(24.2%) 순이었으며, 이는 "교화소내 사망자의 80%가 사망 직전까지 영양 실조에 시달렸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17. 3. 9.

■ “북한 여성, 존중 받지 못해”(자유아시아방송)

- 남측 민간단체인 ‘뉴코리아여성연합’과 ‘휴먼아시아’는 세계여성의 날인 지난 8일 ‘북한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동주최했음.
- 네 명의 탈북여성이 참석해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유린 상황, 북한 내 일상에서의 여성 차별 및 가정폭력 상황 등 북한에서 여성으로서 겪은 인권유린 경험을 증언했음.

2017. 3. 10.

■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비판 “김정남 암살, 정권 성격 보여줘”(미국의 소리)

-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의 최경림 대사는 9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관련한 최근 사례로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지적, 화학무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심지어 국제법까지 위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북한 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이 정권 유지라는 과대망상에 집착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 그 규모와 잔인성이 이미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강조하였음.
- 최 대사는 북한 정권에 인권 유린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국제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에 관한 유엔 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에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 이번 사건은 당사국 간에 해결돼야 할 인도적 사안이라며, 한국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7. 3. 5.

■ 통일부, 북한고급정보 보상금 4배 인상…고위급 탈북민 유도 목적 분석(연합뉴스)

- 통일부는 5일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 한도액이 현행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오름.
-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와 같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보상금을 현실화함으로써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한국 정부, 북한고급정보 보상금 4배 인상(미국의 소리)

- 북한 내 고급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자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행

- 최대 2억5천만원(약 21만 6천달러)의 4배인 10억원(약 86만 4천달러)으로 오르게 됨.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한국을 향하는 경우도 같은 대우를 받게됨.
-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 현행 최고 1억5천만원(약 13만달러)에서 10억원(약 86만 4천달러)으로, 전차·유도무기 또는 그 밖의 비행기는 5천만원(약 4만3천달러)에서 3억원(약 26만달러)으로 보상금 한도가 인상됨. 소총과 기관총, 포 등 무기류는 1천만원(약 8천600달러)에서 5천만원(약 4만3천달러) 등으로 상향 조정됨.

2017. 3. 6.

■ 탈북자단체, 美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서한(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탈북자단체연합이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짐.
- 30여 개 탈북자단체로 이뤄진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탈북자단체연합'의 김성민 상임대표는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과 고위층들에 대해 고사총 처형과 같은 비인간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된 김정은에게 엄중한 법적 처벌을 가하도록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덧붙였다.

2017. 3. 8.

■ 통일부 "보로금뿐 아니라 다른 정착지원예산도 증액 계획"(연합뉴스)

- 통일부가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을 20년 만에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탈북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다른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로금이 북한 고위층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론의 평가이자 해석일 뿐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 "보로금 인상뿐 아니라 나머지 정착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5. 대북지원

■ 특이사항 없음